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총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4.15(수) 10:00~11:40 / 청와대 총무실
- 참석자 : 총 60여명 ※ KTV(국민방송) 생중계
 - △ (부위원장) 국무총리, 민간부위원장(3인)
 - △ (민간위원) 성장·민생·지역 분야 규제 전문가 26인
 - △ (정부위원)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제처 기관장
 - △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내용 >

기 존	명 칭	개 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	부위원장	대통령
-	규 모	국무총리·민간 등 5명 이내
20명 이상 25명 이하	분과위	35명 이상 50명 이하
경제/행정사회		성장/민생/지역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6.2.19 시행)

-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분과위 구성 >

* 분과별 가나다순

분 과	성장분과위	민생분과위	지역분과위
위원장	남궁범 (주)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민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영철 · 김춘순 · 류정모 · 박민수 · 박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세영 · 이종원 · 전창대 · 조원동 · 최원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본권 · 박선규 · 오 균 · 윤일홍 · 이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호 · 이희숙 · 정서원 · 차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동수 · 고은아 · 권태성 · 김기명 · 우윤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창 · 정상훈 · 정은미 · 최상한

-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①한 발 앞선 ②환경변화에 유연한 ③성과 지향 ④국민이 체감하는 ⑤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1.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 건의에 기반한 개별적·사후적 방식의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관련 정보와 환경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신산업 분야는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 (예) 기존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 활용에 규제 공백 多
→ 로봇 분야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 수립으로 규제체계 개선

2.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규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 (예) 자율주행 실증구역이 특정 노선단위로 운영되어 실제 서비스 환경 검증에 어려움
→ 지방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개방하는 등 기술선도국(美中 등)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 더불어 기업규모별로 오랜기간 고착화된 획일적 규제기준을 합리화하여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부담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나간다.

3.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를 통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전환한다.
-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도 혁신성장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제도를 확대·정비*하고,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의 전 주기에 걸친 전폭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 기존 6개 부처, 8개 분야 분절적 운영 → 개선 통합 관리, 신속한 법령정비, 통합지원센터 설치
- 더불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각 부처 규제평가를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현장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유도한다.

4.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 현장수요 중심의 행정 혁신과 국민 눈높이에서의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먼저 창업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부담을 재정비한다. 또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한다.

5.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전 과정에 현장소통 기반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한다. 또한 이해갈등으로 오래 지속되어온 현장의 규제애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화,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한다.

< ②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

- 이날 회의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역대 정부는 여러 특구를 운영해왔으나,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분절적 운영, 제한적인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 국가주도 설계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경쟁 선도에 한계가 있었다.
-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 ▲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여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하여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메가특구의 규제특례 · 정책패키지

- 메가특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투자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먼저 메가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 ▲메뉴판식 규제특례(ready-made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on-demand 특례) ▲UPGRADE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① **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 가능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권한 이양, 인허가 기준완화, 행위제한 해제 등)

*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가^차 메가특구특별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 최종 확정 예정

②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여,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

③ **UPGRADE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

○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하여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① **재정** :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지원 등

② **금융** :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투자,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등

③ **세제** :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 활용 세제혜택 제공

④ **인재** :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 신설**,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⑤ **인프라** :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 조성** 등

⑥ **기술·창업** :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확대**, **창업도시 10개 조성** 등

⑦ **제도** :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등

□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 △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

○ 이를 위해 가^차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26년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

- 현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방안 중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UPGRADE}규제 샌드박스 가상사례 ▲정책지원 패키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산업통상부)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내 영업 활동 등을 허용한다.

※ ②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③^{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현장의 목소리(가상사례)	메가특구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목적의 실외이동로봇을 보도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싶어요 • 실외이동로봇의 공원출입 기준(무게·속도)이 너무 엄격해요 • 현재 제도상 방역로봇을 활용한 소독업을 할 수 없어요 • 제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투입을 위해 실증이 필요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PGRADE}규제샌드박스

- 또한 정책지원 패키지로써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하여,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②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 ②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③^{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현장의 목소리(가상사례)	메가특구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망 요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세요 • 전기차 배터리로 충방전 할 수 있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의 실증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PGRADE}규제샌드박스

- 더불어 정책지원 패키지로써 ▲직접거래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등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③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방안(보건복지부)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 ②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③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현장의 목소리(가상사례)	메가특구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려는데 실사인증을 각각 받아야 해서 힘들어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치료기기는 외래 처방은 가능하나, 입원치료 시에는 처방이 불가해요 ⇒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치된 인체 치아(폐치아)를 활용하여 뼈를 재생시키는 치과용 골이식재 등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려는데,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UPGRADE규제샌드박스

- 또한 정책지원 패키지로써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를 제공하여,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④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방안(국토교통부)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부담을 완화한다.

※ ②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③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현장의 목소리(가상사례)	메가특구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취약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DRT를 운영하고 싶은데, 차량 내 운수종사자가 없어 질서유지·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어려워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속 운행 무인 자율주행 셔틀을 제작·판매하고 싶은데, 현행법상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이 불가능해서 판매할 수 없어요 ⇒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로 자율주행차량을 투입하고 싶은데, 20대 이상의 임시운행 허가실적이 있어야만 패스스트랙이 허용돼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렌터카로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싶은데, 관련 규정이 없어요 	UPGRADE규제샌드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자율주행차 실증을 하고 싶은데, 법령상 세부기준이 없어요 	UPGRADE규제샌드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로 물류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원격주행 규정이 없어서, 물류창고부터 문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수 없어요 	UPGRADE규제샌드박스

- 정책지원 패키지로써 ▲차량정비·충전공간,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특구 내 정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다.

<총괄,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송헌규 (044-200-2396)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우철 (044-200-2397)
		담당자	사무관	박도연 (044-200-2416)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우향제 (044-200-2435)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혜원 (044-200-2437)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고연주 (044-200-2912)
담당 부서 <공동>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장	이재석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송상현 (044-203-4413)
담당 부서 <로봇>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장	최수연 (044-203-4520)
	산업규제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가희 (044-203-4548)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장	이동철 (044-203-4310)
	인공지능기계로봇과	담당자	사무관	여정모 (044-203-4316)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장
	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서기관	안성보 (044-203-3926)
담당 부서 <바이오>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김건훈 (044-202-2320)
	보건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경 (044-202-2902)
담당 부서 <AI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임월시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146)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 '98.4.16 규제개혁위원회 발족 → '26.2 규제합리화위원회 재편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4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3인) 포함,
35~50인으로 구성(법 제25조)

○ 당연직(17) : 대통령(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재경부·과기정통부·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금융위 위원장,
법제처장(시행령 제18조)

○ 위촉직(33) : 규제합리화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민간위원 명단 (4.15 기준)

※ 가나다 순

구 분	성 명	주요 약력
부위원장 (3인)	남궁범 *신 규	現 에스원 고문 前 삼성전자 재경팀장(부사장)
	박용진 *신 규	現 덕성여대 석좌교수 前 제20·21대 국회의원
	이병태 *신 규	現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前 美일리노이대 경영대학 교수
민간 위원 (28인)	강영철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前 풀무원홀딩스 사장
	고동수	現 (주)일정실업 부회장 前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고은아 *신 규	現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前 서울시 건설기술심의회 위원
	구본권 *신 규	現 법률사무소 도윤 변호사 現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재무이사
	권태성 *신 규	現 권익지킴연구소 소장 前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명 *신 규	現 영농조합법인 농담 대표조합원 前 한국 4-H중앙연합회 회장
	김춘순 *신 규	現 순천향대학교 부총장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류정모 *신 규	現 진·리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前 주식회사 배링랩 COO
	박민수 *신 규	現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규	現 (사)더불어꿈 대표이사 前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익수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
	오 균	現 서울연구원 원장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구분	성명	주요 약력
	우윤석	現 송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現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윤일홍 *신규	現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前 美보이지주립대 조교수
	이민창	現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前 한국규제학회장
	이세영 *신규	現 뽀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現 생성IT스타트업협회장
	이인호	現 중앙대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유정 *신규	現 법무법인(유한) 원 대표변호사 前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종원 *신규	現 호서대학교 시용합대학 교수 前 싸이월드 공동설립
	이희숙 *신규	現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現 기획예산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창대 *신규	現 주식회사 더픽트 대표이사 現 강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정상훈 *신규	現 유디임팩트 고문 前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장
	정서원 *신규	現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정은미 *신규	現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조원동	現 (주)페니트리움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前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차상훈 *신규	現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前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최상한 *신규	現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前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원석 *신규	現 (주)두나무 해외사업총괄 임원 前 BC카드(주) 대표이사 사장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건의를 기반으로 사후 정비 → AI 기반으로 사전에 규제 적정성 점검

- AI 지능형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
* AI가 규제정보를 통합·분석, 맞춤형으로 제공
- 신산업 미래 규제 지도 마련
* 분야별 규제합리화 로드맵 설계, 규제 이슈 사전 정비

2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사전 명령·지시적 규제(획일적·경직적) → 분야별·목표별로 유연하게 재설계

-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입증제도 운영
* 부처에 규제 입증책임 부여
-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금지범위 최소화, 사후관리방안 마련
- 기업규모별 제도 합리화
- 생명·안전 규제 레드라인 도입

3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규제를 목표로 인식(폐지·완화·유지) → 수단으로 인식(성과 중심)

- 메가특구 도입
* 지역 광역화, 광범위한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 지원
-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 통합관리체계(국조실) 마련 + 상용화 용이하도록 제도 정비
-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 성과 기반 규제평가

4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행정편의적 규제·지원 설계 → 제로베이스 검토 및 적극행정 면책

- 규제·지원 관련 서류 50% 이상 감축
- 행정조사·행정규칙·자치법규 리모델링
- 적극행정 활성화

5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정부 주도 결정(공급자적 시력) → 현장소통 기반 결정(수요자 맞춤형)

- 현장소통 플랫폼 구축
- 규제갈등 해결 모델 구축

기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개편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메가특구 추진수단

규제특례

기존 규제 개선

메뉴판식 규제특례 (ready-made 특례)

메가특구법상 규정된 타법의
규제 배제·완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on-demand 특례)

기업·지역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규제 배제·완화

새로운 기준 마련

Upgrade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등

기업·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정책 패키지

투자 인센티브

- 재정**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 금융**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정책금융 우대
- 세제** 기회발전특구 활용, 지방 우대

기업 활동기반

- 인재** 지역 거점 국립대 국가대표 단과대 9개 육성, 산학융합지구 확대
- 인프라** 첨단국가산단 확대, M,AX 클러스터 활성화, RE100 산단 조성

산업 생태계

- 기술·창업** 지역자율 성장엔진 R&D,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개
- 제도** 원스톱 지원센터,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 예시 (산업통상부)

메뉴판식 규제특례

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 현황** 로봇 학습을 위해 원본데이터 가명처리 필요
- 개선**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개보위 심의 전제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허가

- 현황** 소방로봇 도로 통행 불가로 위급상황 대응 한계
- 개선** 차도 및 보도 통행 허용, 긴급자동차 주행 특례 허용 *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실외 이동로봇 수익성 제고

- 현황** 옥외광고물 부착 가능 대상에 로봇 미포함
- 개선** 실외이동로봇 옥외광고 허용
- 현황** 푸트트럭만 공원 내 영업활동 가능
- 개선** 실외이동로봇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기업 요청 사례

- A 사도 기업 A** “연구개발 목적의 실외이동로봇을 보도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싶어요”
- B 사도 기업 B**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출입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 C 사도 기업 C** “현재 제도상 방역로봇을 활용한 소독업을 할 수 없어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통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배제·완화

Upgrade 규제샌드박스

기업 요청 사례

- D 사도 기업 D** “제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해 실증이 필요해요”
- AI 기반 가상 펜스** → 노동자 위험구역 출입시 가동중단
- 휴머노이드 제조 현장 실증** → 휴머노이드와 노동자 협업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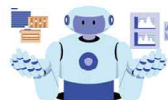
Upgrade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대규모 실증 등 실시

정책 지원(안)

“로봇 메가특구, 글로벌 로봇산업 중심지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혁신 인프라 집적

- 로봇 데이터 팩토리 구축
- 로봇 특화단지 지정 우대
- 로봇 특성과 대학원 지정 우대



지역 스타트업 지원

- 국민성장 펀드, 산업부 자체 펀드·보증 지원
-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M,AX 얼라이언스 활용)
- 공공 조달 확대, 지방 수요창출

